

##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규모 면에서 볼 때 OECD 국가 중 GDP 대비 가계 부채율이 높은 편이며,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소득의 증가율보다 매우 높음. 또한 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 차입비용이 크기 때문에 은행권보다 비은행권 가계부채의 증가가 더 빠르게 증가(김영일, 2017)
- 이는 현실에 존재하는 한계점 때문에 발생하는 가계부채의 부도, 관리 불가능할 정도의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한 부실화, 과도한 증가로 커진 경제의 변동성 등의 문제가 발생(편도훈, 2015)
- 따라서 본 연구는 가계부채의 증가 및 증가로 인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어떠한 요소가 가계부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문제

- 어떤 요소가 가계부채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가?
- 어떤 요소가 가계부채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가?

## 선행연구 분석

- 전성애, 형남원, 「의료비 지출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래전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9
- 의료비가 가계부채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침
-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출도 가계부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 연구 방법

### (1) 연구데이터

- MDIS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마스터)

### (2) 데이터 분석 방법

- Logit 분석 - 가계부채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OLS회귀분석 - 가계부채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3) 변수 설정

#### -종속변수

- 가계부채의 유무
- 가계부채 (부채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값)

#### -독립변수

- 가족형태(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 가구주의 교육 정도, 가구주 만나이, 실물자산, 경상소득, 의료비

## 연구 결과

### (1) Logit 분석 결과(종속변수: 가계부채 유무)

	채택된 가설	계수값 부호
노인가구	대립	-
장애인가구	대립	-
가구주 만나이	대립	-
실물자산	대립	+
경상소득	대립	+

### (2) OLS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 가계부채 규모)

	채택된 가설	계수값 부호
가구주 만나이	대립	-
실물자산	대립	+
경상소득	대립	+

- 다중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만 기술
- 선행연구(전성애, 형남원, 2019)와 달리 의료비가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의료비	3.127	-1.489

단순회귀분석은 유의미한 정의 관계, 다중회귀분석은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맺고 있음. 따라서 상관계수를 통한 판단이 필요함.

- ① 가계부채와 의료비의 상관계수는 +0.04로 다른 변수에 비해 낮은 값임.
  - ② 다중회귀분석의 계수값이 음수인 것은 상관계수 값이 양수인 것을 고려하면 신뢰할 수 없음.
- 이 두 가지 이유로 의료비는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판단함.

- 두 분석결과 종합하여 볼 때, 가구주의 만나이가 적을수록, 실물자산과 경상소득이 많을수록 부채의 크기가 클 확률이 높음. 즉, 가구주의 만나이, 실물자산, 경상소득이 가계부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결론

- 가계부채의 증가 및 증가로 인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구주의 만나이, 실물자산, 경상소득과 관련하여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측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파악해야 함. 문제의 원인과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상황의 흐름 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찾는 것이 요구됨.
-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없었던 코로나19와 같은 국제적인 팬데믹 현상 등의 다른 원인도 고려해야 함. 이러한 현상은 소비지출 등의 다른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차근차근 이를 대처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국가 기관별 인식이 사회 참여 적극성에 미치는 영향: 신뢰도와 청렴도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정진아

## 연구배경 및 필요성

국가기관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는 바와 이미지는 분명하다. 국가기관은 국가운영적 측면에서 청렴해야 하고, 사조직에 비해 공개되어 있으며, 사회적 가치 추구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 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특수한 위치에 있는 만큼 부정적인 이슈는 국민의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국가 기관은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 전체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에 사조직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슈가 행정, 사법, 입법 전반에 걸쳐 생성된다는 것이다. 같은 국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관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관별 인식에 따른 참여의 적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기관별 신뢰도와 사회참여 적극성의 관계를 살핀다.
- 2) 기관별 청렴도와 사회참여 적극성의 관계를 살핀다.
- 3) 기관별 인식 차이로 인한 사회참여 차이를 살핀다.

## 데이터 탐색 및 분석 결과

### 1) 가설 설정

#### ① 국가기관에 관한 신뢰도(Reliability)

- ▶ 가설1: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사회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 ▶ 가설1-1: 정부부처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사회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 ▶ 가설1-2: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사회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 ▶ 가설1-3: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사회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 ▶ 가설2: 국가기관별 신뢰도에 따라 사회참여 적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② 국가기관에 관한 청렴도 인식(Integrity)

- ▶ 가설3: 국가기관에 대한 청렴도 인식이 높으면 사회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 ▶ 가설3-1: 정부부처에 대한 청렴도 인식이 높으면 사회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 ▶ 가설3-2: 국회에 대한 청렴도 인식이 높으면 사회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 ▶ 가설3-3: 검찰에 대한 청렴도 인식이 높으면 사회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다.
- ▶ 가설4: 국가 기관별 청렴도 인식에 따라 사회 참여 적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 가설5: 국가 기관별 인식에 따라 사회 참여 적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연구 모형

독립변수1  
기관별 신뢰도

인식

독립변수2  
기관별 청렴도

독립변수3  
인구사회학적 요인

기관: 중앙정부부처(행정), 국회(입법), 검찰(사법)

참여를 제도적/비제도적 참여로 구분한 기존과는 달리 현실 적합성을 고려하여 참여의 적극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적극/소극 참여로 구분하였음.

종속변수  
참여의 적극성  
(적극적 참여/소극적 참여)

### 3) 변수 설정

독립 변수	기관별 인식	신뢰도	중앙정부 부처, 국회, 검찰
		청렴도	

종속 변수	참여의 적극성	① 적극적 참여	사회 활동 정도	정당 활동, 시민단체 활동
			의견 제시 경험 여부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온라인상 의견 피력,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제출
		② 소극적 참여	사회 참여 경험 여부	시위·집회 참여, 불매운동 참여
			정치 현안 인지 정도	정치 현안에 대한 본인/타인의 인지 정도
		정부 일에 대한 관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 중요도에 대한 인식	
		현안 대화 경험 여부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주변인과 대화 경험여부	

## 연구의 함의

### ① 이론적 함의

#### 1. 참여의 재정의

기존의 연구는 참여를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에만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정보사회화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사회 활동이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온라인이라고 해서 소극적이라고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 참여의 단순 제도/비제도 구분이 아닌, 행동인지 인식인지에 따라 참여의 적극성을 구분하여 새로운 변수를 고안했다.

#### 2. 독립변수로서 청렴도

청렴도가 신뢰도와는 다른 개념임을 명확히 하고,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사회 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혀냈다.

### ② 정책적 함의

- o (중앙정부부처) 투명한 행정 절차/행정 처분에서의 오류 최소화/고위공직자들의 부패나 정치적 연결에 대한 감시와 평가
- o (검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대한 연구 활성화/법률 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쉽게 설명/전관예우와 같은 인치적 요소 지양
- o (국회)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ex. 청년국회)/법률 제정 절차에서의 국회의원의 태도나 법률 제정이 얼마나 사회 이슈에 대해 해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인지

### 3) 교차 분석

#### ① 국가기관에 관한 신뢰도(Reliability) ② 청렴도 인식(Integrity)

사회참여 분야	기관별	국가기관에 관한 신뢰도	
		신뢰도	청렴도
정치·행정 분야	중앙정부	88.3849	1.018-13
	국회	291.2675	4.268-49
	검찰	56.40172	1.818-42
	중앙정부	86.74411	0.030408320
	국회	292.0944	3.138-46
	검찰	92.89872	1.458-14
시민단체 활동	중앙정부	160.0979	1.558-17
	국회	109.4406	3.708-38
	검찰	102.4455	4.988-18
	중앙정부	113.507	2.728-29
	국회	147.8318	2.868-27
	검찰	47.84758	3.588-37
의견제시(헌법 제119조)	중앙정부	93.72017	2.838-19
	국회	291.4884	6.808-47
	검찰	74.03118	1.938-12
	중앙정부	81.55844	7.838-14
	국회	80.51079	1.458-13
	검찰	79.30486	2.838-19
불매운동 참여	중앙정부	77.75504	1.508-16
	국회	74.91781	1.648-12
	검찰	105.711	1.968-15
	중앙정부	129.0709	2.918-25
	국회	43.84189	1.048-07
	검찰	54.11327	6.998-10
정치현안인지(국헌)	중앙정부	34.13217	6.638-49
	국회	218.8805	1.758-24
	검찰	99.40537	3.808-19
	중앙정부	86.72657	2.148-11
	국회	366.2265	2.148-11
	검찰	106.7148	6.848-10
정치현안인지(대인)	중앙정부	109.5048	1.538-15
	국회	102.6354	2.268-14
	검찰	74.06408	9.178-09

o 국회에 대한 신뢰는 적극/소극 모두,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소극적 참여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침.

o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특성상, 정당활동·시민단체활동·의견제시(정부언론, 온라인), 진정탄원청원 제출과 같이 사회 전반에 의견피력 항목 다

o 시위, 집회 참여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불매운동 참여는 검찰에 대한 신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사회참여 분야	기관별	국가기관에 관한 청렴도	
		신뢰도	청렴도
정치·행정 분야	중앙정부	49.51311	1.438-09
	국회	160.7082	3.788-38
	검찰	72.17066	1.208-10
	중앙정부	24.92149	0.0497293
	국회	217.8031	7.468-40
	검찰	127.9159	1.348-08
시민단체 활동	중앙정부	100.0979	1.558-17
	국회	160.0979	1.558-17
	검찰	160.0979	1.558-17
	중앙정부	109.4406	3.708-38
	국회	102.4455	4.988-18
	검찰	113.507	2.728-29
의견제시(헌법 제119조)	중앙정부	93.72017	2.838-19
	국회	291.4884	6.808-47
	검찰	74.03118	1.938-12
	중앙정부	81.55844	7.838-14
	국회	80.51079	1.458-13
	검찰	79.30486	2.838-19
불매운동 참여	중앙정부	77.75504	1.508-16
	국회	74.91781	1.648-12
	검찰	105.711	1.968-15
	중앙정부	129.0709	2.918-25
	국회	43.84189	1.048-07
	검찰	54.11327	6.998-10
정치현안인지(국헌)	중앙정부	34.13217	6.638-49
	국회	218.8805	1.758-24
	검찰	99.40537	3.848-19
	중앙정부	86.72657	2.178-11
	국회	366.2265	2.178-11
	검찰	106.7148	6.848-10
정치현안인지(대인)	중앙정부	109.5048	1.538-15
	국회	102.6354	2.278-14
	검찰	74.06408	9.178-09

o 국회의 청렴도가 적극적 참여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치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청렴도가 소극적 참여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침.

o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특성상, 정당활동·시민단체활동·의견제시(정부언론, 온라인), 진정탄원청원 제출과 같이 사회 전반에 의견피력 항목 다

o 시위, 집회 참여는 중앙정부에 대한 청렴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불매운동 참여는 검찰에 대한 청렴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4) 연관 분석

#### ① 국가기관에 관한 신뢰도(Reliability) ② 청렴도 인식(Integrity)

신뢰	rules	support	confidence	lift
중앙정부	{신뢰_중앙정부=매우불신} => {정당활동=소속X}	0.126	0.9122172	2.4058
	{신뢰_중앙정부=매우불신} => {시민단체활동=소속X}	0.1298	0.9393665	1.6594
	{신뢰_중앙정부=약간불신} => {정당활동=소속X}	0.4351	0.900181	1.6403
	{신뢰_중앙정부=약간불신} => {시민단체활동=소속X}	0.4383	0.906646	1.6402
혼합	{신뢰_중앙정부=매우불신,신뢰_국회=매우불신} => {정당활동=소속X}	0.1119	0.9245868	1.637
	{신뢰_중앙정부=매우불신,신뢰_국회=매우불신} => {시민단체활동=소속X}	0.1158	0.9566116	1.6369
	{신뢰_국회=매우불신,신뢰_검찰=매우불신} => {정당활동=소속X}	0.1556	0.9114202	1.6244
	{신뢰_국회=매우불신,신뢰_검찰=매우불신} => {시민단체활동=소속X}	0.1626	0.9524158	1.6242
	{신뢰_국회=약간불신,신뢰_검찰=약간불신} => {정당활동=소속X}	0.1191	0.9198842	1.6173
	{신뢰_국회=약간불신,신뢰_검찰=약간불신} => {시민단체활동=소속X}	0.116	0.8957529	1.6169

o 가장 높은 lift값을 보인 규칙: '중앙정부를 매우 불신하는 경우, 정당활동을 하지 않는다.' -> 중앙정부가 타 기관에 비해 신뢰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

o 혼합란의 모든 칸에 국회가 포함. 특히 국회를 불신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관과 혼합이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정당, 시민단체 활동을 하지 않음.

청렴	rules	support	confidence	lift
중앙정부	{청렴_중앙정부=매우청렴X} => {정당활동=소속X}	0.1575	0.9058231	2.1974
	{청렴_중앙정부=매우청렴X} => {시민단체활동=소속X}	0.1603	0.9216391	2.1968
	{청렴_중앙정부=약간청렴X} => {정당활동=소속X}	0.45	0.9018036	1.6428
혼합	{청렴_중앙정부=매우청렴X,청렴_검찰=매우청렴X} => {정당활동=소속X}	0.1156	0.9231537	1.6307
	{청렴_중앙정부=매우청렴X,청렴_검찰=매우청렴X} => {시민단체활동=소속X}	0.1185	0.9461078	1.6306
	{청렴_중앙정부=매우청렴X,청렴_국회=매우청렴X} => {정당활동=소속X}	0.1426	0.9253852	1.63
	{청렴_중앙정부=매우청렴X,청렴_국회=매우청렴X} => {시민단체활동=소속X}	0.145	0.9407948	1.6297

o 규칙 '중앙정부를 매우 불신하는 경우, 정당활동을 하지 않는다.'와

o 규칙 '중앙정부를 매우 불신하는 경우, 시민단체활동을 하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타 기관에 비해 청렴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

o 혼합란의 모든 칸에 중앙정부가 포함.

검찰에 관한 인식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중앙정부부처와 국회에 관한 인식은 사회 참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기본법 제정에 관한 소고

## 행정학과 202021931 이제이

### 서론

행정 법령은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국토, 환경, 복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다. 하지만 형사, 민사와 같은 분야와 다르게 법집행 원칙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으며, 이에 국민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행정기본법안」은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사안마다 수백 개의 개별법을 정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원칙적, 일반적인 규정을 통하여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2.12. 국무회의 참조) 제정되었다.

하나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며 관련 쟁점 또한 많아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의의

「행정기본법」은 그간 학설과 판례 위주의 해석으로 적용하던 4600여개의 행정 법령의 기본 원칙을 성문화한 것이다. 이전까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된 행정의 법원칙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하여 더 이상 처분을 다룰 수 없게 된 경우도 재심사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실제 규정을 포괄하는 첫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다. 또한 건국 이래 최초로 행정법 분야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 규정에 관한 단일 법전이 없는 선진국에 앞서는 입법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행정기본법」의 마련은 법치행정 국가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한국의 행정법에 새로운 시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결론

전체적으로, 제정안은 행정기관 책무를 훈시적으로 정한 듯한 내용이 적지 않으며, '기본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명문화할 굳이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느낌이 든다. 또한 이론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들은 규율을 일부로 피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를 고려 하였을 때 아쉬움이 있고, 법치행정 및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행정기본법의 제정 시도는 의미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19.

김성수, 일반행정법, 홍문사, 2010.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I, 법문사, 1992

박영도, 『입법학입문』, 법령정보관리원, 2014

#### 논문

김현준. (2020) "기본법의 정체성 문제와 이른바 행정기본법 명명의 오류"이상학. (2020).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공법학연구, 21(4), 179-221.

이진수. (2020),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vol., no.59, pp.1-25(25pages)

이부하, "헌법재판소의 신뢰보호원칙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 「법학논고」 제48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11, 145 ~ 165쪽.

백옥선."행정기본법(안)의 의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2020), vol., no.59, pp. 67-98 (32 pages)

황승홍,(2010),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 아동·청소년 분야 통합·분리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11-1), 243~270쪽박재윤,(2020) "EU행정절차법 제정논의와 시사점 - 모델규칙상

개별처분절차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박재윤.(2021).행정기본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 처분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65),1-31.홍중현.(2021).행정기본법 제정의 헌법적 의미와 발전방안 :

헌법 원칙의 행정법을 통한 구체화의 체계.공법학연구,22(2),65-105.

#### 기타

법제처, 행정기본법 국회제출제60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5-51면.

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2020.

### 문제점

#### (1) '기본법' 명칭의 문제

대표적으로 '기본법'의 명칭에 관련된 논쟁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본법'이 도입되어 있지만, 본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보단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기본법'에 대한 해석에는 여러 견해가 있다. 기본법은 법률 분야의 계열에서 입법 경제를 도모하는 입법유형과 기술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다. 정책의 내용으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항목을 열거하고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기본적내용을 하는 법이라고 해석한 견해도 있다. 또한 기본법이 재판규범적인 성격보단 '행정'을 위한 법적성격을 갖는다는 의견이 있다. 반대로 기본법은 재판규범적 성격까지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이처럼 기본법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다르며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 의미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 (2) 과징금

과징금은 넓은 의미로 행정작용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무이행 수단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라는 별도의 항목을 마련해 행정상의 강제와 함께 포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제3절의 과징금에 제29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와 제3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규정이 속해져 있다. 하나 이는 연관성이 부족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견해이다.

#### (3) 용어 정의의 혼란

i) 「행정기본법」에는 용어의 정의를 다르게 해 놓은 부분이 있어 혼선을 준다. 제2조 제1호에서 '법령등'은 대통령령 및 법률, 부령과 자치 법규, 총리령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제7조에서는 예규,훈령,지침,고시 등을 포함한다고 해서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ii) 제 2조 제5호에서 '제재처분'의 개념을 정의해 놓았다. '제재처분'이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 혹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제33조 제1항에서 '제재처분'은 각 호에 따른 행정상의 강제는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제23조 제1항에서는 '제재처분'을 인허가의, 등록 말소 처분, 정지,취소,철회처분, 영업소 폐쇄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라고 규정한다.

iii) 제2조 4호에서는 '처분'을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집행하는 법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제38조 규정에서는 '처분'은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제외하는 개념이라 명시되어 있다.

#### (4) 보충성 원칙의 반복

제5조 제1항의 경우 다른 법률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제23조 제4항에서도 이를 언급했고, 제37조 제5항에서도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이미 제5조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보충성 원칙의 적용을 선언 했음으로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 규율할 필요는 없다.

#### (5) 당사자의 정의

제정안 제2조 제3호에는 "당사자란 처분의 상대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정안에서 당사자가 등장하는 규정은 많다.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 38조 제1항과22항이다. 하지만 여기서 처분의 상대방으로 굳이 한정한다면, "당사자"정의 규정은 별도로 둘 필요는 없으며, 본문 해당 조항에서의 처분의 상대방으로 명시하면 충분할 것이다.

### 쟁점

#### (1) 직권취소와 철회

직권취소란 행정청이 스스로의 발의에 의해 행정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18조 제1항에서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귀책사유 이외에 취소로 인한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취소와, 철회의 제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정목적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 (2) 자동적 처분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제20조를 규정했다. 제20조처럼 행정자동화의 길을 열어 두었지만, 제한이 있다. 우선 법령에 의해 허용될 것을 요구한다. 완전히 자동화된 처분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자동화된 행정행위가 규범적인 수권이 없이 발령될 경우, 이는 위법이고 무효에 이를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속행위에 한정된 것이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화된 행정을 "기속결정"에 한정하고 있고, 재량이나 판단여지가 존재하는 절차는 제외되었다. 즉, 행정행위에 판단과 재량이 개입될 수 없어서 자동화 행정은 기속행위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디지털화는 행정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자동화적 행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이념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3) 일반처분의 명문화 문제

일반 처분이란 구체적 사실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하는 행정청의 단독적·권력적 규율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일반처분을 행정행위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제49조 제1항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음식물 판매와 수령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일반처분은 다수의 인적인 범주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처분의 정의를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규정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한국 대학생들의 번아웃 경험

: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중심으로

사고뭉치(구 사회과학연구회)

## 연구배경

대학생이 속한 청년기는 인간의 일생 중 가장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며 창의력과 열정이 돋보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높은 취업 장벽에 대비하여 대학 입학 직후부터 학점 관리와 공모전, 자격증 준비와 같은 취업 준비를 시도한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이미 치열한 입시 교육을 경험한 이후 신체적, 심리적으로 소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난으로 인해 수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렇게 무리하게 과업을 지속한 대학생들은 원만한 학업 수행과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도전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봐야 하는 시기에, 번아웃으로 인한 피로도의 증가는 청년 개인 삶의 낭비로 이어진다. 청년 세대는 사회의 미래를 기성세대와 함께 이끌어갈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이다. 이는 청년 세대의 번아웃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현세대와 전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위해 필요하다.

## 연구목적

첫째, 대학생이 겪는 번아웃의 특징 및 맥락을 파악한다.

둘째, 코로나19가 대학생의 번아웃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다.

셋째, 번아웃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외부 요인을 규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모집방법

모집기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과도한 과업 수행으로 인해 기력이 소모되어 이전 학기와 비교했을 때 의욕이 없으며, 과업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이전 학기만큼 영위하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들로 참여자를 모집했다. 연구대상은 총 8명을 모집했으며, 눈덩이 굴리기 방법으로 표집했다.

### 2. 분석방법: 반복적 비교분석법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개방 코딩은 참여자의 답변 내용을 전사한 자료를 읽으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목을 표시하는 작업이다. 특히, 해당 대목을 잘 표현하는 단어를 적어 둔다. 두 번째는 범주화 단계인데, 개방 코딩에서 비슷한 표현으로 기록된 자료들끼리 분류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같은 범주로 분류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며 범주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범주 확인 단계를 거치면 자료 분석이 종결된다. 범주 확인은 분석 전의 전사본과 범주를 비교하며 자료가 논리적으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범주를 수정할 수 있다.

## 연구결과

### 1. 번아웃 경험 전: 번아웃 원인

주제	상위주제	중위주제	하위 주제
번아웃 원인		코로나 관련 원인	코로나로 인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단절 외부 활동의 제약 비대면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현재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는 막연함	정답이 없는 전공 특성으로 인해 학문에 갈피를 잡지 못함 취업에 대한 부담감 원동력의 부족
			강박으로 인한 무기력한 삶

### 2. 번아웃 극복: 극복의 변환점

주제	상위주제	중위주제	하위주제
극복의 변환점		특정 기점이 없는 경우	특별한 계기 없이 차근차근 호전됨
		특정 기점이 있는 경우	애인과의 이별을 통한 번아웃 인정 과업에서 벗어남 종강총회를 통해 단절된 타인과의 교류 회복 협동 과제를 통해 전공에 대한 인식 전환

### 3. 제언: 번아웃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점

주제	상위주제	중위주제	하위주제
번아웃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외부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외부 부에게 도움 요청	번아웃 경험자들의 도움 체계 구축 학업 성과에 관한 교수의 적극적인 피드백 대학에서의 상담 서비스 제공
		타인과의 교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소모임 구성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외적 환기
		인식 및 제도 변화	휴식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및 교육 제도 개선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로의 이행
	내부	내면적 성찰	번아웃 중의 자신을 온전히 인지하기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

## 결론 및 논의

첫째, '번아웃 극복'과 관련된 답변에서 대학생의 번아웃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코로나는 번아웃의 모든 영역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대외적 지원, 타인과의 교류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번아웃의 극복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 대학생들의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로나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의 과업지향적인 분위기와 정신적인 침체 상황에 대한 선입견을 사회구성원들이 도모하여 바뀌어야 한다. 한편, 대학에서 번아웃을 경험했던 사람과 번아웃을 겪고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번아웃을 겪는 학생들이 더욱 쉽게 번아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COVID 19, 한국 경제에 큰 변화를 불러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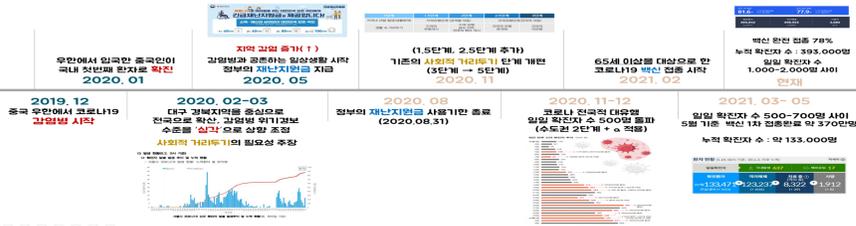
## 서론 - COVID 19의 배경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확산세가 가속화되면서 2021년 1월에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억 명을 돌파, 8월에는 2억 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20년 1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정부에서 제안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시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시장경제는 얼어붙었고 감염병과 공존하는 일상생활이 시작되었으며,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을 구분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력'과 확산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안이 한국경제에 불러온 변화들에 대해 알아보려 하였다.



## 본론

### ·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9 유행의 심각성,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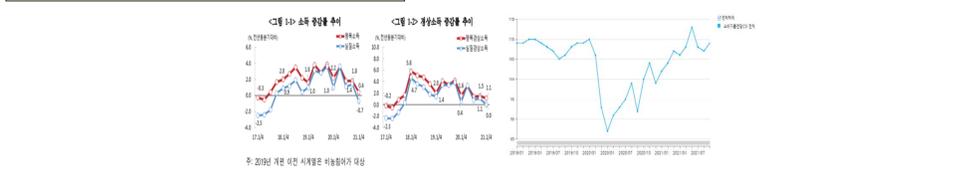
① 3단계(1-3단계) → ② 5단계(1.5, 2.5단계 추가) → ③ 4단계(1-4단계)로 개편



한국은행은 신용정책보고서에서 단계별로 민간소비가 감소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1단계 0.4%, 2단계 3.7%, 3단계 16.6% 감소).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하여 단계 격상을 늦춰 민간 소비의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정책을 개편하였다. 이후 2021년 3월 3차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행동 대응에 대한 메시지가 불명확하여 전환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4단계 체계로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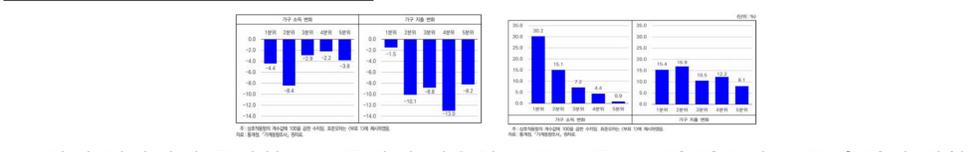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 겹치게 되면서 심리적 방역이 무너지게 되었고, 확산세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 · 가계 소비, 소득수준 변화



소비자 동향지수(CSI) = [(매우 좋아짐×1.0 + 약간 좋아짐×0.5 + 비슷함×0.0 - 약간 나빠짐×0.5 - 매우 나빠짐×1.0)/전체 응답 가구 수×100] + 100  
→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하여 합성한 지수로, 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자 심리 지표 확진자 증가추이에 따라 가파르게 변화하다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 가구별 소득, 지출 변화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소득 2분위 가구가 고용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아, 소득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소득 3-5분의 가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가구 소득, 지출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가구 규모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차등 지급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 부동산 시장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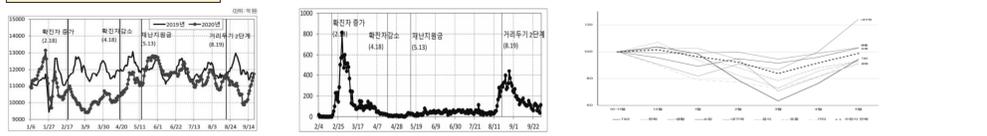
'마스크 없는 생활,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듯이, 코로나 19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정부의 정책적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 지출의 증가추세와 가계 소득 변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었기에 충분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추후 발생 가능한 새로운 전염병,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과 한계점을 드러낸 정책이었다.

보조금의 규모, 단계 변화에 따른 업종별 피해, 단계별 규제에 발생하는 소비지출, 업종별 매출 차이의 정도를 분석하여 단계별 기준에 대한 검증을 통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카드 지출액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20년 2월-4월까지의 19년도와 비교하여 16%정도의 카드 지출액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4월 말-5월에는 9%의 카드 지출액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구역별 카드의 월별 일일 평균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2019년 10, 11월의 평균액을 기준값 100으로 설정하였을 때, 2020년 3월 82.34를 기록하였다.

위의 데이터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는데, 업종별로 분류하였을 때 T&E, 문화업종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생활, 쇼핑 업종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 ·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2020년 4월 - 8월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이 경기도 지역 내에 1.85배의 소비 견인 효과를 불러왔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채무비율은 2021년 기준 51.3%로, 채무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026년 채무비율이 올해보다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 고용, 취업, 금리, 소득계층 변화



2021년 1-2월 월 평균 취업자 수 : 전년 동기 대비 36.1만명 감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고용률의 경우,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금리 : 코로나 이전에는 1.25%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0.5%까지 낮추었으며, 현재 금리를 소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도하게 유동성이 공급되어, 통화 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자 금리를 인상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 분석 결과,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가구의 고소득층, 중산층 비중이 줄고, 저소득층만 늘어 소득 계층의 하향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 주목할 부분

- ① 가계 부채 문제 : 현재 정부에서 상환능력별 대출(DSR)에 대한 논의 중
- ② 자영업자 손실 문제 : 외부활동 관련 업종 분야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
- ③ 정부 보조금 효과 검증 : 소비 진작효과가 예상한 수준만큼 나타났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④ 포스트 코로나 대비,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 백신 접종을 통해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 조직 문화 중 위계적 문화에 있어서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 : 세대 간 갈등이 조직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I. 연구의 배경

- 조직은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차이가 조직 내 여타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로 작용하며 특히 조직문화에서 문제가 발생
- 조직문화에서의 세대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세대 특징 정의하면 다음과 같음  
기성세대 - 강한 책임감, 조직 중시, 안정 추구, 연공서열 중시, 온정주의  
청년세대 - 개인생활, 워라밸 중시,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 능력 높음(권사혁, 2021)
- 여러 조직문화 중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인 위계적 문화에서의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 진행
- 조직문화는 조직성과와 관련이 있기에 조직문화에서의 세대 간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
- 따라서 본 연구는 위계적 문화에서의 세대 간 갈등과 세대 간 갈등이 조직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위계적 문화에서의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IV. 위계적 문화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로 인해 조직에 미치는 영향

- 1) 보상**
  - 가장 대표적 보상인 임금에 있어서 임원들, 즉 기성세대의 임금이 직원들의 임금보다 대폭 상승(LG전자, 삼성전자 사례) 이는 연공서열에 의해 책정된 것임. 이에 대해 기성세대는 객관적인 지표이기에 위계적 문화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세대는 불합리하며 위계적 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며 임금 결정 또한 자신들보다 기성세대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함.
  - 청년세대의 불만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 자체에서 기성세대는 위계적 문화가 사라졌다고 인식하지만 청년세대는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 자신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위계적 문화가 남아있다고 생각함.
- 2) 업무진행**
  - 앞서 제시한 것처럼 과거의 조직문화 경험 여부에 의해 기성세대는 업무진행과정에서 청년세대가 의견을 내는 것은 위계적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이라고 인식하지만 청년세대는 결국 최종결정은 기성세대의 입맛에 맞게 결정되는 '결재라인'으로 인해 피로감과 불만을 느끼게 됨.
  - 보상과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위계적 문화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어 청년세대는 조직을 이탈함. 조직은 인력을 잃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교육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그동안의 업무 공백으로 인해 남은 구성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기가 저하됨. 결과적으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로 인해 조직의 목표인 성과창출과 효율성에서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됨

### VII. 결론

세대 간의 차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험의 차이로 인해 필연적이며 어느 시대에서나 발생하였으며 기술발전이 빠른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두드러짐. 이러한 차이는 각 세대가 위계적 문화를 인식하는 데에서도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성을 향상이 필요. 이를 위해 앞서 제시한 방안들을 실시하는 한편, 기성세대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도록 해야 함. 또한 스스로 위계적인 모습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청년세대는 자신을 존중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며 기성세대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할 것이며 조직에 대한 애정 또한 증가할 것이다. 청년세대 또한 기존의 기성세대의 문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와 경험을 일정 부분 수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수직적인 위계적 문화가 아닌 각 세대가 서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의 확립이 가능할 것이며 결국 그 조직은 더 많은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 II. 위계적 문화에 대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차이

- 다양한 조직문화들 중 위계적 문화는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나이와 직급을 중시하는 한국의 조직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문화이기에 대부분의 조직은 위계적 문화가 나타남.
- 위계적 문화가 강할수록 조직은 수직적이고 위계적 문화가 약할수록 조직은 수평적임.
- 보통 기성세대는 관리자 역할, 청년세대는 직원 역할을 맡기 때문에 위계적 문화에서의 세대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두 집단은 조직 내 위계적 문화를 인식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기성세대는 조직이 수평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수직적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인식하지만 청년세대는 조직 내 수직적 문화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인식함.
- 인식의 차이는 경험의 차이와 조직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됨.
- 기성세대는 지금보다 더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경험했기에 현재는 조직이 매우 수평적이라고 인식하지만 청년세대는 그러한 경험이 없기에 여전히 조직이 수직적이라고 느낌.
- 조직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기성세대는 조직을 우선하기에 자신을 희생하고 수직적 문화에 대해 순응하는 경향이 있기에 위계적 문화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않지만 청년세대는 그렇지 않음.
- 기성세대는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칼퇴근과 워라밸을 챙기는 청년세대를 보며 위계적 문화에 구애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세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기에 인식의 차이가 발생함.

### V. 위계적 문화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로 인해 미래에 생길 문제

- 위계적 문화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로 인해 미래에 생길 문제는 공공 부문에서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공공 부문은 고용안정성이 높는데, 이 고용안정성으로 인해 기성세대도 조직에 그대로 남아 있기에 위계적 문화에 대한 낮은 인식에 기반하여 행동을 답습함. 동시에 업무 진행 과정 또한 앞서 제시한 내용과 같기에 청년세대의 위계적 문화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갈등이 발생하며 조직 이탈을 선택함. 고용안정성으로 인해 오히려 청년세대가 퇴사하는 모순적 상황 발생. 2022년부터 정년을 연장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부문에서의 청년세대 이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음.
- 기업 역시 청년세대의 이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글로벌화 된 현재 국내 유능한 인재를 위계적이고 업무 진행이 비교적 수평적인 외국계 기업에 빼앗기게 되어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음.

### III. 위계적 문화에 대한 세대 간 차이의 심각성

- 위계적 문화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의 심각성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상호 불신하고 이것이 곧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과 청년세대의 퇴사가 늘어나는 모습에서 나타남.
-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은 수직적이고 하향식이지만 대한상공회의소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성세대는 청년세대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원함. 의사결정 최종 권한은 기성세대에게 있지만 업무 진행은 경험이 적은 청년세대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모습에서 청년세대는 괴리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위계적 문화에 대한 세대 간 차이가 세대 간 불신으로 이어지게 됨.
- 신뢰가 사라진 상태에서 각 세대는 서로를 적대시하고 비하하게 되는 갈등 상황이 발생함. 이에 따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낮은 청년세대가 조직을 이탈하는 결정을 하게 됨.
- 2016년의 실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문화에 의해 퇴사를 결정한다는 비율이 53.9%에 달하였고 최근 기업이 고민하는 것은 젊은 직원들의 이직을 막는 것임

### VI.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조직 운영 전략

- 1) 성과급 관리**
  - 투표를 통해 성과급 기준을 결정하고 성과급 관리팀을 무작위로 선발하고 서로를 모르도록 하여 성과급 결정과 관리에 있어서 청년세대의 참여를 늘림. 이를 통해 청년세대의 무력감 완화는 물론 성과급 결정의 합리성 또한 도모.
- 2) 업무진행**
  - 업무진행에서 비대면, 익명 방식의 업무진행을 통해 '결재라인'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표로 최종 결정. 업무진행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음.
- 3) 의사소통**
  - 성과급과 업무진행 외에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또한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중요함.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 이를 위해 기존의 기성세대에서 청년세대로의 교육만이 아닌 청년세대에서 기성세대로의 '역멘토링'을 통해 정보 기술과 같이 청년세대가 더 잘하는 분야를 기성세대에게 알려줌. 이를 통해 세대 간의 이해를 할 수 있고 청년세대의 조직에서의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
  - 회식이나 단합대회 같이 인위적 행사보다 조직 자체를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드레스코드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상품, 생일에 특정 숫자가 들어가면 조기 퇴근을 하는 등 조직 자체를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 오히려 청년세대에게 부담이 되는 인위적 행사가 아니기에 세대 간의 화합이 더 잘 달성될 수 있음.
  -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각 세대는 위계적 문화에 대한 서로의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